

“노동법 개악 강행 즉시 전면전”

민주노총·금속노조 노동법 개악 저지 전국노동자대회 열어 ... “이런저런 핑계 대지 말고 진군하자”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들이 “국회는 노동법 개악 시도를 중단하고,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 라고 요구하며 국회 진격 투쟁을 벌였다.

민주노총은 3월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동기본권 쟁취, 비정규직 철폐, 영리병원 저지, 정부 산업정책 일방강행 저지 민주노총 전국노동자대회’ 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본대회에 앞서 산업은행 옆 대로에서 ‘노동배제, 재벌 퍼주기, 정부 산업정책 규탄, 노동법 개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 를 전개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4월 초 최저임금법 개정과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법을 통과시킬 계획이다. ILO 협약과 연동한 노동 3권 후퇴 법안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결과를 지켜보고 추후에 개악하지는 태도다.

국회는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과 최저임금 결정구조 개편 법안을 4월 1일 고용노동소위에서 논의하고, 3일 환경노동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해 확정된 뒤, 4월 5일 본회의에 상정하는 일정을 잡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개악 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면 총파업으로 저지하겠다고 견해를 밝혔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전국노동자대회 투쟁사에서 “노동법 개악 저지를 넘어 ILO 협약 비준을 요구하고 문재인 정권 규탄을 넘어 정권 퇴진을 고민해야 할 자세다” 라



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금속노조는 3월 26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노동 3권을 누더기로 만드는 경총의 요구를 국회에서 다루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라고 선포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국회가 헌법도 무시하고 노동자의 노동 삼권과 생존권 부정하면 일손을 놓고 거리에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저런 핑계를 대지 말고 민주노총의 이름으로 진군하자” 라고 조합원들에게 당부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ILO 핵심협약은 ILO에 가입한 어떤 나라든 당연히 비준해야 한다” 라며 “ILO 핵심협약 비준은 거래 대상이 아니다. 노동법 개악의 전제 조건이 될 수 없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경총의 시주를 받은 문재인 정부와 국회가 노동기본권 파괴 공작을 시도하고 있다. 정권과 자본이 민주노총과 전체 노동자에 대해 전면 선전포고를 하고 있다” 라며 “민주노총은 전면 반격을

전개하겠다. 노동조합의 모든 것을 걸고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나아가자” 라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조합원 1만 명은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뒤 노동법 개악 저지와 노동기본권 보장 등의 요구를 국회에 전달하기 위해 행진에 나섰다. 경찰은 국회 앞에 차벽을 치고 경찰력을 동원해 조합원들의 국회 진입을 막았다.

금속노조는 민주노총 본대회에 앞서 노조 중앙집행위원회가 결정한 ‘노동법 개악 강행 즉시 전면전’ 이라는 결정을 구호로 내걸고 ‘노동배제, 재벌 퍼주기 정부 산업정책 규탄 노동법 개악 분쇄 금속노조 결의대회’ 를 벌였다.

노조는 이날 결의대회에서 ▲정부의 대우조선 일방 매각에 맞선 밀실 매각 저지 투쟁 확대 ▲불법과건 처벌과 비정규직 차별 철폐 ▲광주형 일자리, 군산형 일자리 추진 중단과 조선산업 구조조정 중단 등을 요구했다.

정석원 노조 경주지부장 직무대행은 노조 결의대회 투쟁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은 시작이 거창했으나 비정규직 확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노동 3권에 족쇄를 채우는 노동법 개악으로 드러났다” 라며 “금속노조는 ILO 핵심협약 조건 없는 비준과 노조 할 권리를 요구한다. 경주지부부터 노동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조직하겠다” 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빨간 당이나 파란 당이나, 노동 착취·탄압 마찬가지로”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공동투쟁 벌여 ... “정부 방관 속 장기투쟁 사업장 고통 계속”

노동 탄압에 고통받는 금속노조 투쟁사업장들이 모여 “공동 투쟁을 통한 공동 해결”을 결의했다. 금속노조는 3월 26일 ‘노동개악 규탄,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 금속노조 투쟁사업장 공동결의대회’를 열고, 청와대 앞에서 서울고용노동청까지 행진했다.

금속노조 경기지부 시그네틱스분회와 인천지부 콜택시기지회,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대전충북지부 콜택지회, 충남지부 유성기업지회, 서울지부 레이테크코리아분회, 성진씨에스분회, 신영프레스전분회, 구미지부 아사히비정규직지회, 부산양산지부 풍산마이크로텍지회,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등 11개 사업장이 공동 행진에 참여했다. 많은 시민사회단체도 행진에 함께했다.

노조 투쟁사업장들은 “극한투쟁으로 사회의 관심이 쏠린 몇몇 사업장은 일부 성과를 냈지만, 여전히 많은 사업장이 사회 무관심과 정부의 방관 속에 정리해고와 부당노동행위로 고통받으며 장기투쟁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노조와 투쟁사업장들은 “노동 존중 공약을



저버리고 노동법 개악을 추진하는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고, 투쟁사업장 문제 해결에 국가관이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행진에 앞서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연 결의대회에서 이승열 노조 부위원장은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결정체제 이원화 등 노동법 개악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라고 비판했다.

윤영섭 풍산마이크로텍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촛불항쟁으로 자유한국당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정권을 바꾸었지만 차이를 느끼지 못하겠다. 빨간 당(자유한국당)이나 파란 당(더불어민주당)이나 조금도 노동을 존중하지 않는다”

라고 분노했다.

정영희 성진씨에스 분회장은 투쟁사에서 “회사는 최저임금이 오를 때마다 각종 수당을 없애더니 쉬는 시간에 화장실 청소까지 시켰다. 그래서 항의하며 노조를 만들었더니 원청인 엘지전자가 물량을 안 준다며 기획 폐업했다”라며 “일자리 창출이 중요하지만 있는 일자리라든 제대로 지키라”라며 문재인 정부를 규탄했다.

장년을 눈앞에 둔 임재춘 조합원이 해고자 복직과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보름을 넘겨 단식 중인 콜택지회 이인근 지회장은 “자본은 정권과 국회를 압박해 정리해고법과 파견법을 들여와 노동자를 마음대로 해고하고 이윤을 착취하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는 노동자를 해고와 저임금으로 내몰 것이다”라며 “내 사업을 넘어 함께 막아내자”라고 호소했다.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행진을 마친 조합원들은 “정치권과 노동부 등 정부기관이 불법 파견과 부당노동행위 처벌을 강화하고, 노조에 대한 손배기압류 금지와 노동약법 폐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우리는 4대 보험 없는 노조법상 노동자들”

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 전 조합원 상경 투쟁 ... “노동 3권 쟁취 때까지 상경 투쟁 전개”

금속노조 자동차판매연대지회가 3월 26일 서울 강남구 현대자동차 국내영업본부 앞에서 ‘해고자 복직, 4대 보험 가입, 직접 고용 정규직화, 노동 3권 보장, 자동차 판매연대지회 투쟁 승리 결의대회’를 열었다. 평일임에도 전국에서 조합원 600여명 가운데 300명이 보였다.

지회는 현대자동차그룹이 ‘자동차판매 대리점 비정규직 노동자는 노조법상 노동자’라는 법원 판결을 무시하며 노조 탄압

을 멈추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말 남안산대리점을 시작으로 현대자동차 아산 배방대리점과 경산 남부대리점 소장들은 잇따라 지회 조합원을 해고했다.

지회는 “교섭 거부와 조합원 해고는 현대자동차그룹 지시 없이 대리점 소장 혼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며 원청 현대차그룹이 노조탄압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투쟁사에서 “투쟁하

면서 노조의 힘은 단결한 조합원으로부터 나오고 이 힘만이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다는 진리를 깨달았다”라고 고백했다. 김지회장은 “정규직화를 쟁취해 왜곡된 자동차 판매 노동시장을 바꾸자”라고 호소했다.

김선영 지회장은 “판매대리점 노동자의 온전한 노동 3권을 찾을 때까지 전 조합원 상경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라고 현대자동차그룹에 경고했다.

“대법원, 박근혜 정권 노조 공격 정치판결 바로 잡아야”

산재 유가족 우선 채용 단협 대법원 합법 판결 촉구 기자회견 ... “노사 자율교섭 원칙 고려 판결하라”

금속노조가 산재 사망자의 유가족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이 위법이라고 판결한 하급심의 판단을 대법원이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3월 2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산재 사망유가족 우선 채용 단체협약 대법원 합법 판결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등법원은 산재로 사망한 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의 유가족이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노조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지 3년이 다 됐지만, 대법은 판결을 내릴 기미가 없다.

해당 산재 사망 조합원의 유가족이 사측에 노조와 맺은 단협에 따라 유가족을 채용하라고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해당 단협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당시 박근혜 정권과 보수언론은 ‘산재 사망유가족 우선 채용 단체협약’에 ‘고용세습’이라는 프레임을 씌워 노조 갑질로 몰았고, 정부는 해당 조항을 고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하부영 노조 현대자동차지부장은 “산재 사



망자 유가족 채용이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법원의 판결이 우리 사회질서를 허무는 판결이다”라며 “정부가 나라를 위해 일하다 죽으면 국가유공자로 지정하고 재켜를 챙기고 고용을 우대한다. 이것도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일인지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하부영 지부장은 “현대차에서 50여 산재 피해 가족의 대체 채용이 미뤄져 고통받고 있다. 지부는 이 가족들을 구제하고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다”라며 “대법원이 박근혜 정권의 정치판결을 바로잡는 정당한 판결을 내려 유가족들의 고통을 줄여달라”라고 요청했다.

김상은 법무법인 새날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산재로 사망한 유가족을 채용하는

단협 조항이 사회질서를 해치는 조항인지 의문이다”라며 “하급심은 수십 년 동안 해당 조항 사례가 20여 건밖에 없기에 시문화됐다고 했다. 이 판결문은 일반 채용자의 고용 기회를 빼앗지 않았음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박다혜 노조 법률원 변호사는 “노사가 대등한 위치에서 자율적으로 정한 단체협약의 효력을 부인하려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노사 자율교섭의 원칙에 들어맞는 판결을 내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 채용 단체협약은 단순한 고용을 위한 조항이 아니라, 기업이 산재 사망의 책임에서 사실상 자유롭고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대법원에 서울고등법원 판결 이후 2년 7개월이 지나도록 나오지 않는 판결을 조속히 내려달라 요구하고, 산재 사망자 유가족 우선 채용 조항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3월 28일부터 매일 대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노조 단협 요구안이 우석형 회장 결재안인가?”

서울 동부 노조·시민단체 신도리코분회 투쟁 연대 결의 ... “떡칠하고 싶지 않으면 단협 체결하라”

신도리코 우석형 회장실의 복합기가 고장 난 듯하다. 금속노조 서울지부 동부지역회 신도리코분회가 2018년 6월 20일 보낸 임금·단체협약 요구에 대한 답변이 아홉 달이 지난 3월 26일까지 출력되지 않고 있다.

강성우 신도리코분회장은 3월 26일 서울 성수동 신도리코 본사 앞에서 연 ‘신도리코 노조탄압 중단, 단체협약 체결 촉구, 분회장 징계 철회 서울 동부 노조·시민단체 기자회견’에서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교섭을 해태하는 신도리코의 현실을 고발했다.

강성우 분회장은 “지난 아홉 달 동안 스물네 차례 교섭하는 동안 회사는 임금과 단 한 개의 단협 조항도 합의하지 않았다. 노조의 제시안 수가 너무 많다는 말만 반복한다”라고 상황을 전했다. 강성우 분회장은 “사측은 노조가 무조건 제시안 항목을 줄여서 다시 제출하라 한다. 신도리코는 노조와 교섭하지 않고 노조의 요구안을 결재하려 한다”라고 비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서울 동부의 노동조합과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신도리코 분회가 단협을 쟁취하고 튼튼히 설 때까지 연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태을 서울동부비정규센터 소장은 “신도리코 창업 이념이 나라·직장·사람 사랑이었는데 조합원들을 사람으로 취급하는지 의문이다. 분회장을 징계하는 창피한 행동을 당장 멈추라”라고 경고했다.